

社說

文정부·시민단체의 '사드괴담' 모두 거짓이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사람에게 해를 줄 정도가 못 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인체 유해 주장이 제기됐던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인체 무해 사실은 이미 2016년 사드 부지 선정 당시부터 널리 알려진 상식이었고, 문재인정부조차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좌파 정부는 진실을 감췄다. 이제 사드 배치를 향한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지만 좌파들은 여전히 진실에 눈 감고 반대를 계속하려 한다.

사드 운용 정상화를 위한 9분 능선으로 평가되던 경상북도 성주군의 사드 부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야권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요 논리였던 전자파에 대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기지 인근인 김천시 월명리에서 측정된 전자파 수치가 m²당 0.003845W, 기지 근처인 m²당 10W에 크게 못 미쳤다.

초안은 "김천시와 성주군에 자동 측정망 5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주민이 (전자파 수치)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세계 각국 레이더 배치 기지 인근 지역이 이 같은 전광판이 설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7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자파는 좌파의 대표적 반대논리가 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사드 반대 집회에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는 노래를 불렀다. 문 정부는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에 불과했다. 2017년 4월 사드 기지 임시 배치가 시작됐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좌파단체가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을 막아도 문 정부는 못 본 척 수수방관했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기지 건설의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용역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평가 절차는 5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주민대표 참여가 막혀 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정권 교체 뒤에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실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본격화됐고, 그 5년간 기지 내 장병들은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해야 했다.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통상 1년은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가 약 6개월 만에 나왔다고 졸속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다음달 2일 개최할 주민 설명회도 저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 초까지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 축적한 자료가 상당한 덕에 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사 다음달부터 시작될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성주 기지 내부 공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6년 만에 사드 배치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사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이다. 세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문 정부조차 해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던 사안이다. 결국 사드 시위는 전자파가 아니라, 좌파의 중국·북한을 의식한 괴담 시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좌파들은 앞으로도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전자파 대신 어떤 구호를 외쳐달지 궁금하다.

노동·규제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진력하자



경제포커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늘어난 60만 개 일자리 가운데 60대 이상 일자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대 일자리까지 합하면 50만 개가 50,60대 일자리였다. 반면 20,30대 일자리는 약 3만 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50,60대 일자리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붓는 재정주도 허드렛 일자리다. 용돈벌이 수준이다.

최저임금만 연령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퇴직고령자들에게 주유원 판매원 경비원 등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제도로 퇴직 고령자들에게는 재정주도 허드렛 일자리밖에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관까지 설치하면서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발했던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도의 도입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시행으로 일자리가 급감하자 하는 수없이 재정을 풀어 고령자 허드렛 일자리를 양산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통계상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사실상 일자리 참가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지난 3분기도 여전히 50,60대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20,30대 일자리는 약 3만개 늘어나는데 그쳤다니 충격이다.

금년에는 경기부진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전년동기비 8만 여개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 고용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연간 대출고졸 등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수가 30만~4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렇고도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운데 윤 정부 들어 최근 추진하는 노동개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대기업 기득권 강성노조의 행태는 노조회계의 불투명성, 채용세습과 비리, 현장폭력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

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나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

하던 가운데 작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지원했던 경남지역 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시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으로 파악돼 방첩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과 폭력이 예사로 자행되는 노조를 이대로 두고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노동개혁이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인 이유다. 아울러 빈사상태로 치닫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규제당국은 물론 기득권의 저항으로 혁신이 저해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회원들이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개혁입법 정취 등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남중수 기자

경직된 최저임금제가 고령자에 재정주도 허드렛일자리만 강성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

한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 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성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자 지연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으로 제2의 '타다 사태' 우려가 제기되었던 사건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지역 단체의 공세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원격의료서비스 등 여전히 유사한 규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막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법법은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빈사상태로 치닫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

스카이&땅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튀르키예는 엄밀히 말하면 아시아권에 속한다. 한반도 면적의 3.5배인 77만9452km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 앙카라도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다. 그렇지만 튀르키예는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등 유럽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튀르키예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상징하는 장소가 미항인 이스탄불이다. 흑해와 지중해를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갈라져 있다.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에 속한다. 유럽지구가 경제 및 상공업의 중심지이며 도시 인구의 3분의 2인 1000만여 명이 거주한다. 시민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다리를 건너 출퇴근하는 진풍경이 빚어진다.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성 소피아 성당이다. 532년 가톨릭교회로

튀르키예



16개 참전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은 1만 4000여 명의 군인을 보내줬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 관중 상당수가 터기 국기를 흔들며 응원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단순한 우방이 아닌 혈맹관계라는 얘기다. 한국인을 형제로 여기고 환대해주는 그들이다. 한국에서 또와 달라진 기꺼이 참전하겠다는 노병들이 생존해 있다.

얼마 전 강진을 당해 무려 5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튀르키예는 온 나라가 슬픔에 휩싸였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지진이 이 제는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 할 차례다. 우리 정부가 급파한 구호대는 현지에서 튀르키예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등 맹활약을 했다. 민간 차원의 성금과 구호품도 답지했다. 70여 년 전의 은혜를 다 소나무 같기 위해서였다. 주말쯤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 있는 튀르키예군 참전비를 찾아 참배라도 할 생각이다.

군사 강국인 튀르키예는 625 전쟁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사라지려나

해괴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원내 과반 의석수에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검찰의 영장정부가 부실하고 불공정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같은 정치공학적 표 계산을 넘어 한심하고 추한 것은 이 대표 본인의 식언(食言)과 지도자로서의 품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자기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이 대표의 말이나 체포동의안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15년간 계속 반복된 논란을 두고 여전히 재탕·삼탕이 이뤄지며 새로운 일이 있는 양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검찰과 윤석열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을 압수수색한 횡수가 332번이라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압수수색 횡수의 상당 부분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혐의 관련 경찰 수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음성점들에 대해 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피해자 코스프레이자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라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온당하다. 국회를 범죄 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의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정의당 원내대표마저 민주화 이후 불체포 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의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질 것을 시사할 정도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처럼 그리 당당하면 어느 국민처럼 판사 앞에 가서 소상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는가.

초미의 관심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오히려 선명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3월부터는 '민생문제 해결과 검사 독재'를 규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윤 정부를 더 세계 몰아부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몰락하는 자중수과 하겠다. 이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해 민주당의 수호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일 뿐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연루된 혐의가 짙은 이 대표 개인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왜 독재이며 윤 정부의 폭주라는 말인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자고 70년 역사의 공당(公黨)인 민주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 나선다면 원내 다수당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을 포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 관리 담당 게시판에 "당과 상관없는 과거의 일로 당과 당원을 합치게 하기에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유형의 글이 적잖은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

대선에서 진 뒤 곧장 인천광역시 계양을 보선에 나가고, 대표 취임 후 당권을 바뀐 기소 후에도 당권을 유지하는 궤변을 보인 이 대표는 '공천 미끼'로 의원들을 볼모로 '방탄'을 하는 모습이 졸렬해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자 이재명'에 줄서기보다 민생 살리기에 줄 서고,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길 촉구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서 李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대선서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해 놓고선 食言 당 흥피 '당과 무관'... 대표 내려놓길' 직시하길